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01일 (화)

제 258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2. '끝까지 함께 하자'
3.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가려진 진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4.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출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고용과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찬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빈민이 직접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31일 숭실대학교에서 출범식을 열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 선언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임금·최저생계의 보장과 안정적 일자리의 확충 등 2대 요구를 내세우며 "이러한 요구들이 국가의 '시혜'가 아닌 '기본적 권리'이며 대중의 직접 참여와 행동으로 실현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현재의 최저임금이 명목적인 숫자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생계비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적으로 저임금을 제거해나간다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단시간 노동자, 장애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규정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정권이 내세운 '일자리 창출'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파괴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본질"이라며 "불안정 노동의 피해를 겪는 계층의 당사자들이 직접 안정적인 일자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와노동' 강동진 편집장은 "800만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고 노동 인구 중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가난한 노동자'는 보편적인 문제"라며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빈곤·불안정노동층의 자발적이고 대중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결성 취지를 밝혔다.

공동행동은 3일부터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이 직접 자신의 생활상을 증언하는 '인권선언' 구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때 비정규직노동자, 노숙자, 철거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신용불량자, 산재 노동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공동행동은 6월과 7월 중에 파견법 철폐, 노동허가제 철폐,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에 대응하여 정규직·비정규직 개인들이 모여 활동을 펼쳐나가는 '비정규직 확산법안 저지 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도 계획되어 있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2001년 생산적 복지에 반대하고 민중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열린 민중복지한마당을 계기로, 복지의 외곽에 놓여있는 불안정노동자와 빈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동행동은 이날 출범식이 끝난 후 '사회적 일자리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기사 처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요구, 이주노동자 농성 200일

'설마 농성을 계속 해낼 수 있을까'했던 마음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200일 동안이나 농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마숨(방글라데시) 씨. 지난 30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된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 결의대회에서 만난 이주노동자의 말이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명동성당에서는 법무부의 강제추방에 저항하며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했다. 출입국관리소의 무차별 연행에 항의하고, 고용허가제의 노동권 침해를 고발하고 나섰다. '자진출국거부선언'을 주도하면서 법무부는 농성자들에 대한 표적단속과 강제출국을 노골화했다. 개비, 혁, 농성단 대표 사멸 씨까지 연행되면서 이들은 목숨을 건 단식으로 농성을 이어왔다.

30일 결의대회는 농성 200일을 기념하며 다시 투쟁의 결의를 모으는 날.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을 지지하는 전국 이주노동자들이 모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동자, 학생 등도 함께 연대했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고 있다는 아나몰리(방글라데시) 씨는 "지난 4월에 한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문제로 지하철에 뛰어들어 자살했다"며 여전히 심각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전하고 "우리도 농성단처럼 대구에서 투쟁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주노동자 몸짓패 '전태일'의 한 이주노동자도 "지역에서 투쟁하는 15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었기에 40여 명의 농성단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이주노동자 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일 동안이나 명동성당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성단 대표 안와르 씨는 "농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들이 걸어온 길은 멀고도 험난하고 얼마나 더 가야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그 동안 함께 해온 농성단원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자"는 말을 전하고 싶다는 하십(방글라데시) 씨의 웃음 뒤로 '질긴 놈이 끝내 승리한다'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기사 처음으로>

##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가려진 진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주종우 씨는 아들 얘기에 목부터 메었다. 2001년 3월, '몸성히 돌아오겠다'던 아들은 자대 배치를 받은 지 2주만에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다. 군대에 갔다와야 사람이 된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면피하는 놈들은 무식한 놈들이라며 힐난했다는 그는, 아들의 주검 앞에서 '무식하고 힘없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구나'하는 생각에 무너져 내렸다. 자식을 잃은 부모치고 누가 억장이 무너지지 않으랴 마는, 군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들에겐 슬픔을 넘어 처절한 배신감과 분노가 응어려져 있다.

군외문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99년. 20여 년간 키운 아들을 하루 아침에 잃은 것도 모자라 죽음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채 숨죽여 살아야했던 유가족들이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아들들의 진상규명을 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군외문사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면서 국방부는 사상 최초로 특별합동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특조단은 아무런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군대내 사망자는 1998년 248명에서 2002년 158명으로 35%나 줄었고 자살사고도 102건에서 79건으로 줄어들었지만, 군외문사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져만 가고 있다.

군외문사 문제는 '조사'와 '결론'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에서 시작된다. 사망통보를 받고 달려가 보면 이미 '자살'로 결론이 나 있고, 사건현장은 '말끔히' 청소돼있다. 수사기록을 보여달라는 호소와 동료 부대원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는 일언지하에 묵살되고, 그렇게 아들들은 의혹의 무덤 속에 파묻혀 버린다. 이는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를 오로지 '군'만이 담당하기 때문에 비롯된다. 결과에 따라서는 해당부대의 지휘관에 대한 처벌은 물론 군 전체가 발칵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한술 밥 먹고사는 '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 한 일. 여기에 사고는 매우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군에 대한 사회적 감시나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점은 문제를 심화시킨다.

설사 백 번을 양보해 군의 조사를 신뢰한다 해도 '결론'은 수궁하기 어렵다. 군은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자살'로 결론지으며, 그 이유를 모두 '개인의 나약함'으로 전가한다. 내성적인 성격, 가정문제, 여자문제, 금전문제 등 천편일률적인 분석 앞에서 유가족들은 "내 아들이 호소하던 군대내 폭력과 가혹행위, 괴롭힘의 문제는 어디 있냐"고! "5천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왜 갑자기 군대에서 정신질환을 앓게되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대로는 보낼 수 없어, 한숨 흠뻑 보내지도 못하고 영안실 냉동고에 아들을 넣어두고 유가족들은 투쟁에 나선다. 삭발을 하고 농성을 하고, 국방부와 국회, 거리를 오가며 아들의 죽음을 밝혀 달라고, 제2, 제3의 자신들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한다. 지난해 이 염원은 '군외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으로 담았지만, 법안은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오는 3일 오후 5시, 시청 앞 광장에서는 '군, 경 의문사 합동 추모제'가 열린다. 군대내에서의 폭력을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혹은 '추억거리'로 회상하는 우리사회를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생겨나지 않기를 읊소하는 심정으로 광장에 나서보는 어떨까? 녀들의 명복을 빈다.

◎유해정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1. 평화, 노래가 되어~ 바람이 되어~

5.29평화축제에 평택선관위, 집회 금지 통보...5.29조직위 "선거 때라고 반전평화와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 17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15명과 여성단체 "이라크 파병 원점서 재검토" 주장(5.24)/ '전쟁반대·미군기지 확장 반대' 울려 퍼진 평택...'총을 내려라'는 주제로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5.29 반전평화 문화축제' 열려(5.29~30)

## 2. 대체복무제도 발동 결자!

병역거부 연대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질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재향군인회, 대체복무제 반대 집회(5.24)/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임 모씨에게 수원지법 남부지원(민병훈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5.27)/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병역을 거부한 신 모씨에게 춘천지법(형사 2단독 이철 판사), 징역 1년 6월 선고(5.28)

## 3. 국가보안법, 폐지밖엔 길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선고...인권단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국보법 폐지 주장(5.24)/ 한국기자협회,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성명 발표...회원 대상으로 서명운동 시작(5.25)/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총련 10기 전 대의원 박 모(경희대 2002년 총학생 회장)씨 연행(5.29)

## 4. 기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별교섭 난항 끝에 중앙노동위에 조정 신청...6월10일 총파업 예고(5.25)/ 노동부, 조선업체 9곳과 사내하청업체 115조사 "불법파견 한 곳 발견"...민주노총 금속연맹, "정부 단독 조사 믿을 수 없다"며 민관공동 조사 촉구하는 한편, 도급 위장한 불법파견에 대해 대대적인 진정 시작/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부는 '민간부문' 행자부는 '공공부문' 따로 추진...사회단체, 민간과 공공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법' 제정과 독립된 감독기구 마련 촉구/ 전국택시노련, 운수노동자 보호특별법 제정과 부가가치세 감면분 전액 지급 등 촉구(5.27)/ 개악 집시법과 서울광장이용조례를 반대하는 '불복종 집회', 경찰의 방해 속에 무산(5.28)

## &lt;기사 처음으로&gt;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02일 (수)

제 258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2. ▷ 즐거운 물구나무 ◀ '지문'만이 나를 말한다?
3.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법무부가 오는 6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개정을 통한 장애인 인권 확보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일 정부제1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절차상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주현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정책부장은 뇌병변, 언어장애 2급 장애인, 김 씨는 얼마 전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중 진술서에 자신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서명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 유병주 소장은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장애인은 경찰의 협박과 위협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며 "장애인을 위해 가족이나 믿을만하고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보조인을 반드시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지난 3월부터 공청회를 개최해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공동행동이 준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인의 범위 확대 및 보조인 선정의 고지의 무 추가 △국선변호인 제도의 보완 △장애유형에 따른 재판서 등의 작성과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의 보완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인적 규정의 마련 등이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보조인의 자격을 법정대리인, 가족뿐만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조서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담통역인 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또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해 의 사소통보조인 또는 비디오테일 등을 통한 진술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동행동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법무부와 대화를 해왔지만 법무부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힘들다"는 공허한 말뿐이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공동행동과 뜻을 함께 하고 있는 37개 인권사회단체들과 공동의 이름으로 법무부에 형사소송법 개정 요구서를 전달하였고,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 ▷ 즐거운 물구나무 ◀ '지문'만이 나를 말한다?

어느 날 J씨는 인감증명을 떼러 동사무소에 갔다. 지문날인거부자인 J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권과 인감도장을 내밀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공무원은 J씨에게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보라는 주문을 했다. J씨는 당황스러워 약간 더듬거리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이어 공무원은 "지문이 없는 것은 신분증이 아니다"라며 지문이 박힌 주민등록증을 만들라고 강권했다. 게다가 인감증명발급 대장을 내밀며 "이곳에 지문을 찍어야만 인감증명서를 떼어줄 수 있다"고 육박질렀다. J씨는 1999년 전국민 주민등록증 갱신 때 지문날인을 거부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없다. 공무원이 보여준 모니터 화면에는 J씨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지만 디지털화된 사진과 지문란은 비어 있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은 J씨에게 공무원은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라며 J씨를 J씨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주민등록증' 뿐임을 강조했다. 분명 국가가 발급한 또 다른 신분



중 '여권'을 제시했으나 헛수고였다.

결국 J씨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지만, 지문날인을 거부했다고 민원 업무조차 제한 받는 현실에 분통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최근 수원시가 지문감식기를 동원하여 즉석에서 디지털화된 지문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니 J씨는 이 땅에서 살길이 막막하다. 국가에서 증명할 사진이 박힌 신분증도 지문이 없으면 안 된다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J씨는 아연실색 할뿐이다. '국민감시'와 '행정효율'을 앞세우는 정부의 태도에 인권의 자리는 없었다.

지문날인이 전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열 손가락 모두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곳은 없다. 개인식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라면 최소한의 정보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최소한의 정보에 지문날인과 주민등록번호는 1순위로 빠져야할 대상. 지문날인과 주민등록번호, 우리에게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지만 '원래 그런 것이 없다고 상상'하면 다른 방식이 보일 수 있다.

<기사 처음으로>

##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1. 민간인 살인과 포로학대 ...반인륜 범죄로 얼룩진 침략전쟁

미군의 이라크 포로에 대한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가 폭로되었다. 전세계로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인권단체들은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는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범죄"라며, 미군의 이라크 철수와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를 촉구했다(5/7). 포로학대에 관해 럽스펜드 국방장관은 면피적 사과를 했을 뿐(5/8), 미군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2월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과 영국군의 이라크인 포로 학대는 침공 초기부터 시작됐으며, 이라크 전역의 구금시설에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5/10). 미군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내에서는 파병반대 촛불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다(5/15). 이라크 주둔 미군 헬기가 결혼식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미사일 공격을 가해 이라크 어린이와 여성 45명이 사망했다(5/19). 엠베스티 인터넷서널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미국 주도의 대 테러전쟁은 최근 50년 중 가장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양산해왔다고 지적했고(5/26), 교황 역시 "고문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비난했다(5/27).

###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검찰과 법원만 모르쇠

검찰은 유엔자유권위원회가 작가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한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에 대해 열람조차 불허했다(5/4).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원내대표가 교토통신과의 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을 1년 안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진행중이다(5/6). 일본 유학시절 대남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넘기고 지령을 받아 국가보안법(회합·통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안덕영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지난해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한 정재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했다(5/13).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7월 중순 국회에 정책건의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5/20). 법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도 국가기밀이라며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5/24). 한국기자협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언론자유와 언론개혁은 없다"며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5/25).

###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대체복무제 논의 활기

문경의 한 초등학교 교사 최진 씨는 "전쟁의 야만적인 폭력과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로써 폭력을 강요받는 군대에 갈 수는 없다"며 세계병역거부자의날에 현직교사로는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5/15). 평화인권연대는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대학로에서 '군인을 집으로'라는 행사를 열고 '대체복무제 도입, 이라크추가파병반대' 서명을 받았다(5/15).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모 씨 등 3명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5/2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에서 대체복무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5/24). 반면, 재향군인회는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체복무제를 무산시키겠다"고 주장했다(5/25). 춘천지법(이철의 판사)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5/28).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03일 (목)  
제 258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실속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2.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3.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실속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중증·만성환자 혜택수준 기대 이하 ... 보건의료단체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실속은 하나도 없다"며 도입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6개월간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 제도는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들에 의하면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실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의사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비용은 절반 이하이며 나머지 병실료, 식대, MRI 검사 비용 등 총 의료비의 반 이상이 '비급여 진료비'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총 1천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지출되는 일반적인 중환자의 경우, 이 중 보험 혜택의 대상이 되는 급여 비용은 4백만원 정도이며 여기에 3백만원의 상한제가 적용되면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금액은 백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의사는 "지금의 상한제는 형식적인 측면이 크다"며 "3백만원을 초과하는 보험진료비가 환급된다는 말은 들리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감면되는 비용은 정말 적다"고 주장했다.

건강상세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최근 의료비 문제로 자살한 환자 가족 등의 예를 들어 "서민이 의료비를 일년에 몇 천만원씩 부담하면 가계가 파탄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원래 고액의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만성·중증 질환자를 구제하자는 의도로 만들자는 것인데 입법 예고된 상한제는 그 의도를 거의 반영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개인이 책임질 수 없을 만큼의 의료비를 한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안은 거리가 멀다"며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처럼 소득이나 질환에 따라 보험 적용을 조정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서민·빈민을 위한 실질적인 개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처음으로>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첫 무죄 선고 이후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비등한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참관한 후 1일 보고대회를 열었다.

연대회의의 공동집행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 성공회대 한홍



구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보고대회에서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한국의 대체복무제 도입의 가능성이 논의됐다.

한홍구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간 현대전의 양상변화,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성장과 민주화 등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병역제도는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낡은 병역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라는 이유로 공익 판정을 받은 신체등급 1~3급 중 54%가 현역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종교적·평화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옥으로 향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인의 선택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현재 대만은 대체복무가 현역의 임무에 비해 결코 쉽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오히려 현역을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자격심사가 군·학계·사회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의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복무 기간도 현역에 비해 4~11개월이 길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 제기가 차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는 모든 나라들이 언제나 초기엔 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다고 전하는 최경민 씨는 "병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실용적 제도 개선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한 대만이 대체복무자들의 사회 봉사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처럼 대체복무제도는 인간이 행복할 권리까지 충족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국내 언론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를 소수 종교의 문제나 병역 기피의 문제로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옥행까지 감수하며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과 특권층의 병역 기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는 군사 훈련이 필요 없는 대체복무자들의 훈련을 면제시키고, 평화주의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전문자격이나 자원봉사를 통해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체복무에 지원케 함으로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할 경우 병역기피자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걱정은 대만의 경우에 비추었을 때 설득력이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과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판단이 필요한 이 때, 대만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사 처음으로>

##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대만의 대체복무 전환 신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요건과 복무 기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신청조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해당 종교에 2년 이상 속해 있어야 하며, '심리적으로 현역 상비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신청 시 종교단체로부터 발행 받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 때 종교단체는 정부에 합법적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가정에 중대한 상해, 질병이 있거나 장애인인 있을 때도 돌볼 사람이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경우 대체복무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일반인들의 경우엔 대체 복무가 필요한 각종 기관에서 지정한 국가고시 합격 증명, 중앙주관기관에서 발행한 전문 기술 증명과 그와 관련된 학력·경력 이 있거나, 전공 훈련을 받으면 대체복무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한 지 만 1년이 되고, 봉사한 시간이 150시간 이상 이 될 경우 자원봉사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 요건이 구비된다. 이러한 자격에 해당은 없지만 신청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일반인들도 신청 가능하다.

<심사과정> 대체복무 신청 시에는 신청 이유서, 자서전, 서약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들은 군·학계·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체복무영역> 대체복무자는 사회치안(경찰·소방), 사회 서비스(사회·환경보호·의료·의료·교육서비스), 기타 행정원이 지정한 분야(문화서비스·사법행정·외교·토지측량·경제안전·체육·공공행정·관광서비스) 등 자격 요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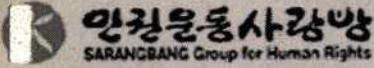
<대체복무 기간> 종교 사유 대체 복무자는 현역 상비군의 복무기간보다 4개월 연장된 2년 2개월로 가정사유로 인한 대체 복무자 1년 10개월(현역상비군과 동일) 보다 길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앞으로 종교 사유 대체 복무자의 복무 기간 또한 현역 상비군과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04일 (금)  
제 258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2. '아들을 세 번 죽일 수는 없어'
3.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수급권자·노점상·노숙인 등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외침이 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앞에서 울려 퍼졌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선언기획단'(이하 공동선언 기획단)은 3일부터 5일까지 가난한 이들의 인권주장을 선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동선언 기획단은 '빈곤이 인권침해이고, 우리사회 800만에 육박하는 빈곤층은 결국 불안정한 노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국가인권위 진정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시혜의 대상이던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이 당당히 권리의 주체로 나서 국가에게 책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 김태현(최육란열사추모사업회)씨는 한달 최저생계비 31만원으로는 실제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밝히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먹고물이 아닌 실질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급권자들은 진정서에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으로 '최저생계비 책정에 가구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필수항목 증가와 항목별 급여 인상 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추정소득 부과지침을 철회하고 가구의 실제 소득을 근거로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인권위에 요청했다. 추정 소득 부과지침은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등 모호하고 광범위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임의로 추정된 소득이 실제소득보다 높게 책정됨으로써 수급권자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어 전국민연인합회 최한용 씨는 "20여 곳의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해 용역 200여명과 전경 2중대가 새벽 4시에 11톤 트럭 네 대 이상을 끌고 출동하는 것이 노점상이 쥐고 있는 삶"이라며, "50대 이상 서민들이 하루 1~3만원 정도 수입을 주는 리어카마저 없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나"고 호소했다. 정부의 노점단속은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영위할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것. 특히 정부가 노점상을 철거하는 데 있어 대안적인 생계를 제공하지 않아 이들은 더욱 심각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진정서에서 노점상들은 "폭력적인 단속행위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이에 대한 구제권고를 국가인권위에 요청했다.

노숙인의 건강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도 이날 보고됐다. "IMF 이전엔 나도 세금을 빠지지 않고 냈던 서울의 시민이었다"라고 말하는 노숙인 김학식 씨는 "이제는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도 입원할 방이 없어 쫓기고, 신분 증명을 위한 서류를 이것저것 제출해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기 어렵다"며 현실을 개탄했다. 특히 진정서에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이 노숙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시스템의 폐기를 국가인권위가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진정서 제출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청 앞 잔디 광장에서 '고용허가제는 강제노동 허가제', '빈곤은 인권의 박탈', '11시간 노동에 임금은 56만원' 등의 피켓을 들고 집단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공동선언 기획단은 5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이주노동자, 산재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선언' 기자회견과 진정서를 제출하고 오후 2시에는 여의도 국민은행부터 영등포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또한 22~24일에는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제2차 공동행진이, 7월 16일에는 청년실업 해결과 여성노동권 실현을



위한 제3차 공동행동이 준비되어 있다.

<기사 처음으로>

## '아들을 세 번 죽일 수는 없어'

군·경 의문사 추모제 열려 ... 진상규명 위해 특별법 제정돼야

흐르는 눈물에 짓무르고 벌겋게 부어오른 두 눈. 아들의 영정을 쓰다듬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길은 차마 멈출 수가 없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살려내"라며 나지막이 되뇌이다 결국 오열하며 힘없이 쓰러지는 어머니.

"23년 고이 길러 군대에 보냈거늘 싸늘하게 식어 돌아오다니. 사랑하는 아들이야. 단 한 번만, 한 번만이라도 보고싶다. 차디찬 냉장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널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고 강태기 상병의 어머니 유기선 씨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다.

3일 오후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시청 앞 광장에서는 올해로 네 번째 '군·경 의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와 천주교 인권위원회(군·경 인권대책위원회)가 함께 준비한 이날 추모제는 억울한 젊은 죽음을 위로하는 범능 스님의 추모 노래로 시작됐다.

아들을 군에 보냈다가 차가운 주검으로 돌려 받고 망연자실했던 유가족들, 잠시도 잊을 수 없는 아들의 사진을 앞에 두고 유가족들은 다시 가슴을 쳤다.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의혹 투성이의 죽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군 의문사 유가족들은 죽은 아들을 냉동고에 두고 생업도 포기한 채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다.

지난 한 해 군 사망자는 150명, 이중 '자살'로 처리된 경우는 69명으로 사망자의 46%가 자살이라는 결론이다. 2002년에도 군은 사망자 158명중 50%인 79명이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군 의문사 유가족들은 아들이 세 번 죽는다고 말한다. "누구처럼 뺄 없어서 군대에 가서 죽고, 부검으로 또 한번 죽고, '자살'로 결정되면서 낙오자·부적응자라는 불명예로 죽는다"라고. 더욱이 '자살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이기에 군 의문사 유가족들의 의혹과 분노는 가시질 않는다.

유가족들은 군 의문사가 바로 '이웃'과 '친지' '가족'의 문제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고,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국가형벌권의 실현과정에서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형사소송절차는 발전하였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한 국가의 정치와 법문화의 발전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말한다. 독재체제에서는 정치가 반법치적으로 왜곡되고, 민주화될수록 법치주의는 실현되기 마련이다. 이는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유신독재가 청산되지 않은 형사소송법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은 1954년 공포·시행된 이래 8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1973년 1월 3차 개정은 유신 정권 치하의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때 구속적부심제가 폐지되고, 긴급구속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재정신청이 제한되는 등의 후퇴가 있었다. 그러다가 1988년 2월 6차 개정에서는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199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199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7차 개정 법률에서는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고, 긴급구속을 긴급체포로 바꾸고, 특히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 내용이 담기게 되었다. 그렇지만 1997년 11월 국회에서 통과한 8차 개정 법률에서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를 제한하는 방향의 후퇴가 이뤄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 보다 적극적인 자세 필요

새 정부 들어와 대법원과 법무부는 각각 형사소송법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정치적 격변을 거치는 과정에서 출현한 권위주의 정부의 권력남용과 전횡 앞에서 사법부와 형사재판은 종종 무기력한 채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의 전면 확대와 변호인입회권을 규정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정작업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런 정부와 대법원의 노력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 기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단체들이 보조인 제도의 확대나 진술권의 보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난색을 표명하였다는 보도는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본지 6월 2일자 기사>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과거 독재정권의 잔재를 깨끗이 털어 내야 할 것이고,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유엔자유권위원회에서 지적받은 바 있는 과도한 기소전 구속일수(일반 사건 30일, 국가보안법 사건 50일)의 축소와 고문 등을 부추기는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 등이 근절되도록 하는 대책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이나 성폭행 피해자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과 증인에 대한 보호 규정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법원은 애초 개정 취지와 달리 소극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른 민주화가 적극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식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사 처음으로>

---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05일 (토)  
제 258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2.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3.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각종 언론들이 너도나도 '이웃', '희망', '나눔'을 이야기한다. 한겨레, 오마이뉴스는 말할 것 없고, '분배'나 '평등'을 요구하면 빨간딱지부터 붙이던 조선일보까지 '결식아동', '희망 공부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업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표방해 온 중앙일보도 '가난 대물림을 끊어주자'고 외친다. 실업,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가난에 침식당하는 이 때, 언론이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언론들이 권장하는 '빈곤 탈출'의 해법, 그 '나눔'의 실체가 무엇이나는 거다.

캠페인의 재원부터 이야기하자. 오마이뉴스의 '청소년가장의 희망일기', 조선일보의 '희망 공부방'은 모두 <삼성>이 지원한다. 중앙일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한국 최고의 기업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진실을 모르는 소리다. 경영권과 더불어 970억 원이라는 재산을 편법으로 자식에게 상속하는 범죄기업 <삼성>은 캠페인을 지원하면서, 감세 혜택을 받고 이미지 표백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 하지만 그건 자본의 점탐을 더 높이 쌓으며, 가난한 사람을 주변인으로 만드는 '빈곤 영속화' 프로젝트다.

더 큰 문제는 언론들이 보통 사람들의 '나눔'을 권유하는 사이, 국가가 옹당 져야 할 책임이 우리의 시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습기와 곰팡이로 가득 찬 지하셋방에 사는 장애인 모녀,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 등 어려운 이들을 돕는 연대의 정신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녀야 할 덕목이다. 그러나 빈곤이 뼈뺏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봉사'와 '나눔'으로 극복될 문제인가. 이것은 인권의 문제, 국가 책임의 영역이다. 돈이 없어 비인간적인 주거 환경에 살 수밖에 없는 것, 주위의 도움 없이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인권침해다. 정부는 '인간다운 생활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주거권', '먹을 권리',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에 따른 책임을 망치고 있다.

고문을 당하면 그 가해자와 정부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국가가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인권을 빼앗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이 인권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현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빈곤으로 인한 구체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관계 부처의 책임을 묻자. 필요하다면, 법정에 세우자. 또 돈 놓고 돈 먹는 사람들, 부를 세습하는 사람들에게선 그에 걸 맞는 세금을 걷어 부를 나누자.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은 더 이상 '나눔'의 수혜자가 아닌, 자주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자. '빈곤 탈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

<기사 처음으로>

##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보안수사대가 지난 해 11월 9일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를 최근까지 무리하게 체포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해 11월 1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조직부장 김정철 씨를 비롯하여 최근 5월 31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직2부장 박유호 씨 등 21명이 보안수사대에 연행되거나 자진출두 해 조사를 받았다. 이중 현대자동차 비정



규칙노조 김상록 씨 등 8명은 구속되었고, 나머지 13명은 불구속처리 됐다.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문경근 기획실장은 "보안수사대가 사수대, 화염병 투척자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대한 광범위한 탐문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씨는 보안수사대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하면서 자백을 받거나 사진채증, 증인 등을 발견하면 구속하고,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불법집회 참석을 이유로 불구속 처리했다는 것이다. 불구속자들은 불법집회의 '공동정범'으로 규정되어 현재 불구속재판 진행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은 4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보안수사대의 해체'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보안수사대가 자신들의 발줄을 연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연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으로 학생, 민주인사의 피를 빨아먹다가 이제 장사가 안되니까 노동자의 행복을 빼앗고 있다"며 보안수사대 해체를 위해 함께 싸우자고 주장했다.

보안수사대는 경찰청 보안국 보안과의 별칭으로 주요 업무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수사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본청)을 포함, 각 지방경찰청 보안과별로 보안수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4곳이 있고, 인원만도 3천101명(2002년)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2004, 323쪽)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이번 사건이 정부정책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까지 공안수사와 대상으로 확대·적용한 사례"라며 "보안수사대가 우리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보안수사대는 있을 이유가 없다고 못 박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역할과 업무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노동자대회에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손배가압류 철회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주장하는 5만 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당시 경찰의 과도한 폭력으로 노동자 50여 명이 중상을 입었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113명이 연행됐다.

<기사 처음으로>

##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편집자주]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된 쟁점과 대안을 3회에 걸쳐 실는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낡은 역사적 명제 앞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새로운 관점과 접근이라고 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평화적 신념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택한 오태양 씨의 말.

지난달 21일 법원이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후, 점차 그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에 혼선이 가중되면서 처벌의 기준이 되는 병역법의 위헌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재촉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헌법에서 드러나는 '양심의 자유' 의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와 부딪힌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양심의 자유'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 정의하고 있다. 또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건 외부로 드러날 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충돌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양심은 '내심의 영역'과 '실현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실현의 자유를 통해서 보장될 수밖에 없다.

안보 개념, 인권·평화 담론으로 재구성해야

국방부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2001)'에서 "우리가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량한 양심'을 보호해야할 국방부가 '오늘의 자유와 행복'이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을 통해 지속되는 것임을 인정한 것. 이에 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정렬 판사는 "국가의 형벌권과 개인의 양심의 자유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형벌권이 한발 양보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주목을 받았다. 국방부가 계속해서 '양심의 희



생'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방부는 "병역거부 행위는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우리의 안보환경 하에서...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이유로 양심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바로 '냉전적 사고방식'의 전형이다. 역사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한 것은 오히려 군대와 전쟁이었다. 때문에 안보의 개념을 군대와 경찰의 힘으로 유지되는 '국가안보'가 아닌 인권과 평화의 가치관을 담은 '인간안보'로 재구성해야 한다.

#### 전쟁시라도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역사적으로 평화시기보다는 전쟁시기에 활발하게 일어났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약 4만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 전세계 평화·반전운동으로 이어졌으며 베트남 전쟁 당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미국은 결국 모병제로 전환했으며, 걸프전 때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이어졌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병역거부가 국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살인이 자행되는 전쟁시기에 오히려 활발해졌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극단적 상황이 있어서조차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헌법적 의미에서 본 '양심의 자유'의 본질일 것이다.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전세계 162개나라 중 미국, 영국, 독일 등 114개국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위원회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2년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결의안은 "모든 사람은,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관한 합법적인 권리행사인 병역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도록 재검토할 것을 해당 국가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정부도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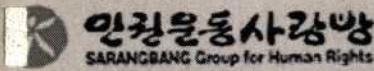
하지만 여전히 521명(2004년 2월 15일 현재)에 이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매년 약 700명의 사람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처벌되었다고 한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상생과 조화의 관계'로 재검토하고자 하는 병역거부자들의 울림이 과연 공명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기사 처음으로>

제본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08일 (화)

제 258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上)
2. 자치활동에 손배·가압류?
3.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현실 속의 '올드보이'
4. 불안정노동자들의 인간선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上)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연대회의, 목적별 공부(公脩)안 제안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는 워크샵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됐다.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가결되면 호주제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지난해 11월 정부는 호주제 폐지 이후 신분등록제 대안으로 이른바 '조대현 판사안'이라고 불리는 개인별신분등록제를 제출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목적(사건)별 공부(公脩)'를 중심으로 한 개인별신분등록제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의 안이 발표돼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에서 다음으로답은여성연대 타리 활동가는 "정부안(조대현 판사 안, 현재 변호사)은 배우자, 부모, 자녀의 정보를 담고 있고 인적관계방식을 따른다는 점에서, 이들의 존재와 주민번호를 통한 나이·성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분사항 증명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연대회의는 '출생이나 국적취득을 통해서 존재와 국적을 증명하는 신분등록부와 당사자의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혼인등록부, 이들의 변동사항은 각각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목적(사건)별 공부(公脩)'를 제시했다. 즉 신분상황의 등록과 공개를 철저하게 사건중심으로 편제함으로써 인적관계 및 가(家)관계가 가져올 수 있는 성차별 및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소한의 정보를 담은 공부를 목적별로 분산함으로써 개인정보의 과다누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조대현 변호사는 서면논평에서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의 신분사항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부모·배우자(혼인, 이혼)·자녀(친자, 양자, 인지)·사망·친권·후견·국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시의 대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가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전산기록에 등록시키되 그 공개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은우 변호사는 "공시를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일반인의 눈에 보여주느냐는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짜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표준화된 양식'은 일반인의 관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지 출력만의 문제가 아닌 틀을 짤 때부터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

시간, 경비 등 현실화 방안에 대한 입장도 큰 차이를 보였다. 조대현 변호사는 "갓가지 신분사항별로 기록을 달리한다면 비용과 노고를 몇 배나 증가시키면서도 신분사항의 확인도 매우 번잡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은우 변호사는 "공동연대의 안은 현실적이며,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라도 지금처럼 출생, 혼인, 사망신고를 하던 대로하면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下)는 6월 9일자로 실습니다>

<기사 처음으로>

자치활동에 손배·가압류?



**고려대, 총학생회 점거 농성에 학생회비 가압류 청구 밝혀**

학교가 총학생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겠다고 나서,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6일 학교측이 "본관 점거농성에 따른 기물파손 등의 물적 피해와 학사행정 일정 등이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손해배상액은 현재 학목과 액수 등을 산정 중이고 아직 총학생회에 지급되지 않은 학생회비 2천 6백만원 중에서 감액될 것"임을 전달해 왔다는 것. 이 밖에도 고려대는 농성에 참여한 학생 17명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등록금 인상 반대 등을 이유로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총학생회 백종성(법학과 98) 사무국장은 "학교측은 손해배상이 행동에 따르는 응당한 처벌이자 당연한 의무라 말하고 있는데, 의무가 요구되려면 그만큼 권리도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학생들은 그 동안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운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일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고, 따라서 점거농성은 사회적 문제라기보다 대우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시도였다"고 점거농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백 사무국장은 "지난 3월부터 학교와 등록금책정위원회 등의 자리를 통해 등록금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학교는 책임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학교가 하는 일을 학생들이 못 민느냐'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토로하며 "이번에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탐색하지는 않고 학생회비를 압수하고 학생들을 처벌하여 처리하려는 것은 학생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앞으로의 학생활동도 계속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학교측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기업에서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액을 청구, 노조 활동을 정지시키는 데 악용되면서 비난을 받아왔던 손해·가압류가 대학 내 학생자치활동에까지 등장하자 학생들의 비난이 커져가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현실 속의 '올드보이'**

올해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올드보이>는 '가둔 자'와 '갇힌 자'의 대결을 그린 영화다. 15년 동안 중국집 군만두만 먹으며 사육된 '갇힌 자'의 복수극은 33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고, 개봉 전부터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극장문을 나서면서 우리는 이 피튀기는 잔혹극이 영화 속 이야기라는 사실에 안심한다. 그리고 '갇힌 자'라는 소재는 남의 이야기, 아니 가능성 없는 영화 속 설정이라고 치부한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갇힌 자'들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외진 산자락 아래에 '기도원', '○○원'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미신고복지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용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의뢰로 입소된 정신장애인, 알콜중독자 등이 대부분이다. '거리정화'차원에서 경찰에게 붙들려온 행려자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 4월 현재, 전국에는 모두 1000여개의 미신고 복지시설에 2만여명이 넘는 생활자가 수용되어 있다. 이들 시설의 특징은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수용자들의 퇴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수용자들은 '버림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존중의 대상이 아니다. 시설 안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인권침해는 그야말로 '후진적'이다. 내 팔다리 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갇힌 구조에서, 거침없이 날아드는 폭력에 맞서는 일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미신고복지시설이 민간에서 벌어지는 '사설감옥'이라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갇힌 자'를 양산하기도 한다. 정부는 '사회보호법'이라는 그럴듯한 법률 아래에, '교도소에서 죄 값을 치르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그들'을 감호소에 붙잡아두고 있다. 감호소가 범죄자들을 감화, 교육하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수용소'에 가깝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법 제정 이후 24년 동안 벌어진 참혹한 인권유린의 참상도 더 이상 낫설지 않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우리 눈에 띄지 않도록 '격리'된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한다. 안에서의 일상적인 인권침해는 말할 나위도 없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감금은 그 자체가 폭력이다. "눈에 거슬린다" 혹은 "위험하다"며 강제로 격리된 정신장애인, 행려자, 피보호감호자 등을 외면한다면 우리 역시 '가둔 자'라는 가해자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근에는 머릿속까지 감시하고 검열하는 거대한 '빅브라더'가 스멀스멀 기어 나와 우리를 우리 안에 가둔다. <올드보이>는 현실에도 있다.

◎최혜정 님은 한겨레 21 기자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불안정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국가인권위에 2차 진정접수



빈곤과 불안정노동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의 인권선언이 5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또다시 울려 퍼졌다. 지난 3일 수급권자·노점상·노숙인의 집단진정에 이어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선언 기획단'(아래 기획단)은 이날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에 이주·산재·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정서 약 150건을 접수했다.<관련기사 6월 4일자 참조>

기획단은 진정서에서 현행 최저임금이 도시노동자 월평균 가계지출의 30%에도 못 치며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전체 임금의 1/3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임금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를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또 기획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정규직 임금의 50~70%를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파견노동자의 경우 저임금과 해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계약직노동자의 경우 근속연수에 비례해 산정되는 임금이나 상여금·수당·퇴직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기획단은 한국정부가 사회권규약 제7조 1항이 규정한 "공정한 임금과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을 실현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에 즉각적인 시정권고를 요구했다.

한편 기획단은 97년 IMF 이후 기업부담을 줄이고 산재 제정을 아끼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산재보험급여 거품제거대책지침' 이후 산재노동자들이 마구잡이식 요양불승인과 강제치료종결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직업병의 예방, 치료 및 억제'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사회권규약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요양관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번 진정에서는 △영장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및 연행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부정하고 이주노동자를 1년 단위의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에도 확대되고 있는 산업연수제 등이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주범으로 꼽혔다.

'인권선언'에 참여한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민은행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나라당 컨테이너 당사, 전경련, KBS본사를 거쳐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사까지 행진하며 '파견법 철폐, 노동허가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을 외쳤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09일 (수)  
제 258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세계화는 '빈곤의 대중화'를 남긴다
  2. 부자 대학 가난한 노동자
  3.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下)
  4. 진상규명 할 수 있게 하자

## 세계화는 '빈곤의 대중화'를 남긴다

### 13~14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화회의에 저항하는 민중행동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전쟁에 저항하는 아시아 지역의 민중행동이 서울에서 결집될 전망이다.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 회의에 맞서 8일 오전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아래 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 조직위원회(이하 공동행동 조직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회의 반대 행동의 의의와 계획을 밝혔다.

정상회의는 전 세계 정치인들과 초국적기업 총수들이 모여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을 논의하는 동아시아 지역 회의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표제를 내걸고 13~1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상회의 어디에도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이 처한 빈곤이나 실업, 해고, 노동조건 악화, 실질임금 저하, 여성에 대한 폭력·차별과 관련된 논의는 없다. 오로지 전 지구적으로 자본의 세계화와 돈벌이, 군사주의를 강화하는 의제들을 논의한다"며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의 뒤를 이어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을 관철시키려는 정상회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전국빈민연합회 김홍현 의장은 "멕시코는 NAFTA 체결 이후 일자리 감소로 서민들은 더욱 가난에 허덕이고 마실 물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WTO, FTA 등 세계화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지는 것은 결국 빈곤의 대중화 뿐"이라고 말했다. 또 "자본의 전도사인 정상회의의 개최는 결국 우리 나라도 멕시코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이증호 의장은 "현재 농민은 FTA 폭풍에 피눈물을 흘렸고, 많은 노동자들이 분신했으며, 대학생은 오르는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휴학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 조직위는 이번 행사에 아시아지역의 170여 명 활동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동국대에서 전야제를 시작으로 13일 대학로를 거쳐 장충단 공원까지 이어지는 '정상회의 반대 행동'에는 2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맞선 아시아 민중·사회 운동들간의 연대 강화를 위한 '아시아 민중 사회운동회의'가 14~15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다. 행사기간동안 △식량주권 △비공식·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권 △이주노동자 △반전평화 △빈곤과 홀리스 등의 주제로 워크숍이 진행되며 고려대 곳곳에서 반전엽서 전시회, 깃발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 부자 대학 가난한 노동자

### 고려대 미화원들, 용역재입찰에 생존권이 왔다갔다

하루에 10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한 달에 최저임금 567,260원을 받는 대학 미화원 노동자들의 삶이 용역업체 재입찰을 앞두고 점점 나락으로 물리고 있다.

고려대는 6월 학내 청소·경비 업체 재입찰을 앞두고 입찰을 희망하는 용역업체들과



함께 7일 설명회를 진행했다. 8개의 업체가 참가한 설명회에서 이들은 하나같이 노동 조건 변화를 입찰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 용역업체는 '시간제 교대 노동'을 제시했다. 현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공식' 노동시간이지만, '시간제 교대 노동'에 의하면 노동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로 분할된다. 각 시간대별로 노동자의 수도 달라지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된다. 미화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교대제가 실시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져 근무에 오히려 혼선이 가중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미화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나섰다. '학내 미화원/경비원 분들과의 아름다운 연대를 만들어가는 모임'이라고 소개하는 '불철주야'는 8일 대학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9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고용승계 △최저가 낙찰제 폐지 △노동강도 완화 등의 요구안을 가지고 총무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후 불철주야 박장준 집행위원장은 "면담 내내 총무처장은 학교측이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건과 임금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지금보다 3.5배의 비용이 드는데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려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는 것.

하지만 2002년 고려대는 일반용역비로 91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13억 원만을 집행했다. 이 해 고려대의 이월적립금은 무려 1,4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대는 지난 99년 미화원 노동자들을 직영 고용에서 용역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인원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노동강도는 두 배로 강화되었다. 커다란 대학 건물의 한 개 내지는 두 개 층을 한 명의 노동자가 담당하게 되므로 이들은 '공식' 노동시간보다 앞선 오전 5시에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들이 받는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에 '불철주야'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 시정을 요구한 결과 지난해부터 미화원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었다.

<기사 처음으로>

##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下)

### 성소수자·프라이버시 보호 담아야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논의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는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냐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식은 호주제 폐지 운동이 그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에만 한정돼 다양한 한 위치에 있는 소수자의 차별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한 한계 속에서 제기됐다.

5일 워크샵에서 다름으로담은여성연대 타리 활동가는 "(호주제 폐지운동으로) 이혼, 재혼 가족 안에서 부자간에 성씨가 달라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은 공론화 되었지만, 특정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며 "호주제의 폐지와 그 이후의 대안이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정상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정상가족으로 편입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별신분등록제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의 목적별 공부(公佈)안은 인적관계 및 가(家)관계가 가져올 수 있는 성차별 및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사건별 편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타리 씨는 "정부안이 신분관계를 가족 관계로만 파악하고자 할 때, 한국사회가 이성애적 핵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외의 가족형태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즉 모든 개인은 부모와 자녀가 있고, 그것이 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기본이 된다는 인식은 한부모 가족, 비혼모/부, 비혈연 공동체, 독신가구, 동성간/이성간 동거 등의 형태를 '비정상화' 하는데 일조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한국동성애자연합 케이 씨는 "성 소수자에게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가족형태별 차별이 가장 결정적으로 직면한 문제"라며 "정부안은 이성애·핵가족 중심주의 및 가부장적 전제를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 씨는 정부의 안이 이성애자의 성 정체성만을 반영할 뿐이라며, 당장 호주제 폐지가 우선이라는 주장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은 "공동연대 안은 주민등록법이 존재할 수 있는 효용근거를 형해화 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데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며 공동연대 안이 애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공부 및 주민등록정보와의 연동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워크샵은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여성·성소수자·정보인권 운동단위의 다양한 입장을 확인하며 쟁점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 대안적인 '신분등록제'를 만들어 가는 첫 걸음이 되었다.

<기사 처음으로>

## 진상규명 할 수 있게 하자

의문사위, 조사권한 한계로 진실에 접근 못해



21년 전 의문의 죽음에 대한 조직적 조작·은폐, 목인 등이 밝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죽음의 실체는 규명이 안되고 있다.

8일 의문사건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는 "김두황 사망사건에 대한 헌병대의 수사가 조작·은폐된 것이며 과거 보안사령부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망 시각과 장소의 조작·은폐를 확인했음에도 기무사령부, 국방부, 경찰청 등의 비협조로 인해 사망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3년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강제 징집된 후 3개월만에 사망한 김두황에 대해 당시 헌병대수사는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자살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됐던 유서 '끝'이라는 시는 이미 지난 1기 위원회 조사에서 조작된 것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헌병대수사는 김두황이 "밤 11시 35분경 자신의 총기로 실탄 4발을 연발 발사해 자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6시~8시경 다른 근무자들이 단발음의 총성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총성 청취 후 사건현장에 나갔던 인사서무병 김 모씨 역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어둑어둑했다는 진술(당일 일몰 시간 8시 30분)을 하고 있다. 이처럼 사망 시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건발생 장소에 대해서도 상항근무자들, 연대장, 대대장 등이 지목한 장소와 헌병대수사 기록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시체가 사망한 장소에서 이동됐고,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를 조작하거나 사인 조작을 위해 재총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덧붙여 위원회는 '판할 보안부대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도 헌병대수사대에 의한 조작·은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은폐와 조작에 보안사령부가 주도, 목인·방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과거 자살 결론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사망의 실체'는 위원회 권한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원회 박종덕 조사 3과장은 "시간만 연장해서는 진실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며 "김두황 사건 등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석거부, 위증, 자료 비제출 등에 관한 조사권한 강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위원회는 사건 당시 보안부대에서 보안사령부로 보고한 '사망사건보고서'를 비롯해 기무사령부에 보고된 자료를 요청했지만 '존안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을 뿐이다. 현재 위원회의 조사권한으로는 자료에 대한 접근과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9일 기무사령부를 방문, '사망사건보고서' '활용보고서' 등의 자료확보를 위해 실지조사를 하고 자료부재의 경우 생산·존안·폐기 근거를 확인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후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11일 (금)  
제 259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2. 클릭! 인권정보자료
3.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4. 수용자, 교소도 수감 이틀만에 자살
5. <인터넷 기사> '장기수 송환' 정부, 외면하지 마라

##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17대 국회개원에 즈음해 전국 29개 인권단체들의 수평적 연대체 모임 '인권단체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17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인권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국회 입법활동의 기준으로 '인권'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17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철회'를 꼽았다. 또한 개원과 함께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인권입법 과제로 △친일파진상규명법 개정 △의문사진상규명유한특별법 6월내 개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 제정 등을 들었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남상헌 의장은 "현 의문사법은 대상범위에 민주화운동 관련성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과거 권위주의 통치에서 발생한 많은 의문사들(군의원사, 삼청교육대)이 제외되었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의문사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했다"고 비판한 뒤 "6월 30일이면 의문사위가 조사를 마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범위를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의문사 일반'으로 확대하고 조사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장은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이 시급히 제정되어 한다"고 강조하며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관련 유족들의 증언이 절대적인데 고령의 유족들이 죽어가면서 학살을 증언해줄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주영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겠다며 몇 차례 개정했지만 현실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 외 다른 길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집시법을 개정하고, 형기를 마친 사람을 또 다시 감호소에 가두는 사회보호법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가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입법 과제를 제시하게 된 배경에는 16대 국회의 반인권적 입법활동과 정책결정이 17대 국회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연석회의는 국회 입법활동이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상 기본권에 합치되기 위해서 2004년에 선결되어야 할 7대 인권입법과제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집시법 전면 개정 △사회보호법 폐지 △형사소송법 대폭 개정 △민법 개정을 통한 호주제 폐지와 개별 신분등록제 도입 △취직금지법 개정 △비정규직 보호 법률 제정 등을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를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개별 입법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보낼 예정이다. 인권단체들은 2004년 말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을 평가하고, 반인권적 입법태도를 보인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 클릭! 인권정보자료

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한국의 소수자집단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복지증진 방안 연구」



지은이: 윤형숙 외/ 펴낸곳: 보건복지부·한국문화인류학회/ 201쪽/ 2004년 3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들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지원 방안을 탐색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문화인류학회의 책임 하에 8명의 연구진에 의해 쓰여진 이 보고서는 국제결혼 배우자,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이주 여성, 성적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살피고 이들을 위한 경제적, 문화적, 법률적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각 집단별 연구 결과에 대한 수준 편차가 크지만, 보건복지부의 용역으로 쓰여진 보고서라 소수자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인권 문제를 짚은 연구가 눈길을 끈다. 1990년대 말부터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필리핀 여성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필리핀 여성들이 가장장적 가족질서로 편입된 이후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서 부부간 갈등, '돈 값(결혼비용)을 해야 한다'는 시집 식구들의 눈총, 심리적·정서적 고립, 남편의 폭력과 폭언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 연구자는 이들 여성을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 제공,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남편의 동의를 있어야만 국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적법의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장애인들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애수당과 국민연금 제도가 있지만, 급여 수준이 매우 낮다. 국민연금제도 역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천적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여에 따라 수급수준을 달리하지 않는 '무기여 장애연금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 외 인신매매와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적 체계를 구축하고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적 복지정책을 수립하자는 제안, 노숙자는 물론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사람을 홈리스로 보고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차별과 대안적 교육기회 차단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 등도 귀기울일 만하다.

<기사 처음으로>

##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청송감호소의 악랄한 인권침해 행위를 고발한 한 수용자를 검찰이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형사합소9부(재판장 강형주)는 10일 청송감호소 당국에 대한 윤 모 씨의 무고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씨를 법정 구속했다.

윤 씨의 사건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송감호소에 수감중이던 윤 씨는 93년 교도관들의 집단구타와 인권유린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가 무혐의 처리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교도관들은 윤 씨에게 재정신청을 취하할 것을 종용했고, 94년 1월경에는 교도관들로부터 "재정신청이 취하됐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윤 씨는 96년 10월 가출소 한 후에야 자신의 재정신청이 '자신의 명의'로 취하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 후 윤 씨는 당장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걱정해야하는 처지이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찾기 위해 1년 동안 변호사단체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했다. 간신히 주위사람들의 지원으로 한국문서감정원으로부터 '재정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감정서를 받아 사건 당시 소장이었던 여광석 씨 등 교도관 4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윤 씨가 '허위사실로 고소했다'며 그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씨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사건 심리를 중단하고 검찰이 제기한 무고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2003년 5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윤 씨에게는 무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윤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04년 6월에도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이 사건의 최대쟁점은 '재정신청취하서'를 윤 씨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교도관들에 의해 위조(전사(傳寫, 베껴어 씌) 등을 포괄) 됐는지 여부.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대검찰청 소속 문서감정원이 '무인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피력한 점 △(취하서 무인에서)직접날인을 뒷받침하는 인주성분의 미세한 입자가 발견되고 용선(지문의 선)이 유연한 점 △전사의 특징이 발견되지 않은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양후열 씨 역시 문서감정을 통해 '윤 모의 필적이 맞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윤 씨와 변호인 임영화 변호사는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씨는 연신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윤 씨는 "사실 감정사들은 '내 것이 아니다'라



고 주장하는데 국가 기관은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내가 내 손으로 제정신청 취하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진실"이라고 절규했다.

임 변호사 역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시작한 사건"이라면서 "끝까지 가 봐야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상고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실이 대법원에서 밝혀질 수 있을지 제3라운드의 결과가 주목된다.

<기사 처음으로>

## 수용자, 교소도 수감 이틀만에 자살

### 유족·인권단체, '교소소 관리 소홀 책임' 문제 제기

전주교소소에 수감된 지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수용자가 자살했다. 전주교소소 측은 6일 오후 8시 18분경 독방에 수감중이던 김모 씨(26)가 자살 기도한 것을 근무 중인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9일 새벽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발견당시 자신의 바지를 이용해 목을 맨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후송했을 땐 이미 뇌사상태에 빠져있었다. 한편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들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무부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감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김 씨를 독방에 구금시킨 이유와 김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교소소측의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소측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관리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과학연구소는 10일 김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목을 매 죽은 의사'라는 잠정 사인판정을 내렸다.

<기사 처음으로>

## <인터넷 기사> '장기수 송환' 정부, 외면하지 마라

'장기수 송환' 정부, 외면하지 마라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뒤편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장기수들로 속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날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이하 송추위)는 2000년 9월 2일 1차 송환 당시 전향 등의 이유로 송환에서 제외됐던 출소장기수 28명의 2차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순덕(2004. 4월 사망)·정순택(84) 씨가 전향 무효를 선언하고, 고성화 씨(89) 외 29명이 2차 송환을 요구한 것은 이미 2001년 2월부터다. 장기수 박종린(72) 씨는 "우린 그저 6·15 공동선언 합의 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거야. 약속한 걸 정치적 이득 때문에 이행 않는 걸 보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어"라고 탄식했다.

송추위 집행위원장 노진민 씨는 송환 희망자가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강조하며 그 시급성을 피력했다. 더욱이 "이 중 12인은 전쟁 포로로 조건 없는 송환이 당연했던 분들"이라며, 전향제도의 잔혹성을 이미 정부가 인정하고 폐지한 상황에서 전향을 이유로 한 송환거부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세계인권선언은 누구에게나 거주 이전의 자유,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2차 송환 문제는 당연히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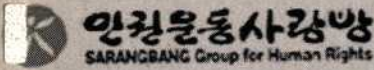
송추위는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6·15 남북 공동 선언 제 3항에 명시되어 있고, 1차 송환 당시 송환대상자가 다시 나타날 경우 바로 송환한다는 통일부 당국자의 약속도 있었던 만큼 송환은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송추위는 기자회견 후 통일부에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에 관한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

<기사 처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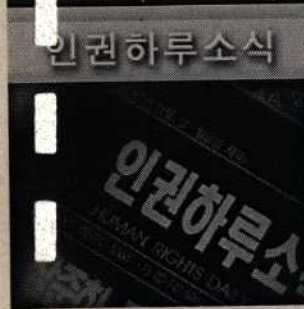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12일 (토)  
제 259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정부가 나서 집 장사하는 나라
  2. 안하무인 기무사, 빗장 걸린 진실
  3.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4. <알림> 세계경제 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의 날

## <논평> 정부가 나서 집 장사하는 나라

"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공약대로"와 "백지화"에서 오락가락하는 사이, 대통령이 아예 채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의 귀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 값과 전세금에 갇혀 가는 집 없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보다. 대통령의 눈에는 쪽방에서 찜질방으로, 찜질방에서 다시 거리로 떠돌아 다녀야 하는 사람들의 불안한 잠자리가 보이지 않는가 보다. 타워팰리스와 비닐하우스촌이 공존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 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영입의 자유와 개발사업을 통해 이윤을 챙길 건설업자들의 권리뿐이란 말인가.

건설업자들이 조직적 담합을 통해 분양가를 '뺑뺑기'함으로써 잇속을 챙겨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 서울의 동시분양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무려 1305만원. 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가 실시된 이래 서울의 평당 분양가가 2배씩이나 상승했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 사이 함께 치솟는 전세금에 집 없는 사람들의 허리는 더욱 휘고, 쪽방조차 구하지 못해 거리로 나앉는 사람들도 늘어갔다. 그럼에도 사업이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구나 대통령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존재해야 할 주택공사를 두고 이런 말을 했다는 데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주택공사가 또 다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이윤을 남겨온 구조가 옳다는 것인가. 주택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살던 사람 내쫓아 새 집 짓고 웃돈 없어 팔아 이윤을 독점해 온 것이 옳다는 것인가.

집은 상품도, 재산 축적을 위한 투기 대상이어서도 안된다.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적절한 주거공간은 필요하다. 주택공사는 국민들 주머니 털고 가난한 사람들 올려 '장사'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사람에겐 집을 제공하고 모두가 그냥 집이 아닌 '살 만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비는 부자들과 살지도 않을 집 사들여 투기하는 사람들에게서 마땅히 받아내야 할 세금을 거둬들이면 될 일이다.

<기사 처음으로>

## 안하무인 기무사, 빗장 걸린 진실

### 의문사위, 실지조사 또 무산 ... 의문사법 개정으로 조사권한 강화만이 해결책

"이런 기반적인 군대가 우리 국민의 군대가 맞는가" "절대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종로구 소격동 군 기무사령부의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 김희수 제1상임위원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11일 오전 의문사위 관계자들은 10일에 이어 실지조사를 시도했지만, 기무사는 정문을 걸어 잠근 채 대구조차 하지 않았다.

9일 기무사를 방문한 의문사위는 강제징집 후 사망한 김두환 씨 등, 군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과거 보안사령부에서 작성한 '사망사건 보고서'가 마이크로 필름으로 존재하는



지의 확인과 5공 녹화사업의 기초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5공 전사(前史)' 자료를 요청했다. 의문사위는 기무사로부터 "5공 전사의 목차 열람과 요청한 자료가 마이크로 필름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10일 방문 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기무사는 하루 전에 약속한 협조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10일 저녁 기무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 의문사위 관계자들은 11일 오전 한상범 위원장, 김희수 제1상임위원, 홍춘의 제2상임위원 등과 함께 또다시 기무사에 대한 실지조사를 시도했지만 이번엔 아예 '문전박대' 당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기무사는 강제징집·녹화사업과 관련한 자료 요청에 '보안사(현 기무사)가 주도한 일이 아니라 교육부, 국방부 등 정부가 추진한 것이고, 사령관의 지시로 당시 관련자료도 전체 파손되었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의문사위는 "기무사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냐"고 비난하고 "기무사가 자신의 범죄적 행위 기록인 공문서를 스스로 파괴했다고 범죄를 당당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문사위는 성명에서 "국가기관이 '말로만 협조'를 약속하고 위원회를 기만하는 위선적 태도 속에서 이 땅 민주화의 현주소를 확인한다"고 개탄해 마지않았다.

한상범 위원장은 "없는 자료를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기무사의 태도에 유감을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6월까지로 마감되는 의문사위 조사기한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진실을 밝혀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문사위는 관련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미해결 의문사 사건을 남겨둔 채 6월말로 활동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문사법 개정은 한시가 급한 시점. 더욱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거부, 위증에 대한 제재가 약한 현재 의문사위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진상규명에 무엇보다 필수적인 조건이다.

<기사 처음으로>

##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저는 현역 이등병입니다. 저는 짐승이 아닙니다. 저는 맞아야 말을 듣는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이고 싶습니다. 작업 중에 몽둥이로 때리고 장난이라 합니다. 참을성을 기른다고 발바닥을 몽둥이로 때립니다. 취침소동하면 가슴을 만집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합니다."

5월 30일 '이등병'이라는 이름으로 국방부 게시판에 오른 글의 일부분. 그는 아무리 말리려고 해봐도 소용이 없었다며 결국 "마지막 희망"이니 꼭 도와달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육군 자료에 따르면, 2000년 군대에서 폭행 건수는 605건이나 되었다. 1980년부터 1995년까지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자살 3,263명, 폭행치사 387명 등 모두 8,951명이다. 최근까지 해마다 자살자는 100여 명에 이르는데, 이는 민간인 자살률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해마다 5천명 이상의 정신질환자가 발생하고 탈영병도 매년 1,500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젊은 시절에 2년여 동안 군대에 있어야 하면서도 이들이 받는 월급은 2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군 면제자는 '신의 아들', 현역병은 '어둠의 자식'이라 불리는 현실, 이것이 현재 군대의 모습이다.

#### 군내 인권 개선을 통한 형평성을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누가 군대에 가려고 하겠느냐"며 남북 대치상황, 병력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대체복무제 불가론'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역설적인 방식으로 현재 군의 문제를 시인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 주장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상의' 대체복무제와 비교해 보아도 군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권 유린의 공간'이다.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이지만 우리 사회는 군인을, 군인정신과 복무규율에 따라 관리·통제해야 할 전투력으로만 보아왔다. 우스개 소리로 '군인은 인간이 아니라 군수품'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명백히 문제는, 대체복무제 실시에 따라 군대를 기피하게될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인권 침해의 요람'으로 자리잡아온 군대의 현실이다.

#### 군 문제 개선,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2002)에서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방지책으로 금지규범의 확립을 통한 예방과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및 처벌을 통한 사후적 통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집합행위, 열차려 등 5대 금지 사항 법률화 △외부통제 기관으로써 군 율부즈만 제도 도입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인권교육 강화 △군 수사체계 정비 및 사법제도 개선 △의문사 해결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등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군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에 관한 법률로써 '군인법' 제정 △전문적



정신상담 청구권 인정 △근무지 재배치 청구권 인정 △공식적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권 인정 등을 제안했다.

또 사병의 노동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사병은 군대에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한다"며 "군인의 노동력은 일당 8백~9백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병들의 인건비는 전체 국방예산의 0.8%에 지나지 않으며 대만에서 사병들이 2개월간 받는 급여가 우리 사병들이 24개월 동안 근무하고 받는 급여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사병들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병역제도 전반 및 군 구조개편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군대 내 인권문제를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만 시찰 결과, 대체복무 인원 중 자살자나 의문사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사병들의 군 복무적응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자원해서 현역에 지원한 사람들도 심리적 박탈감이나 반발심도 적어 지휘관이나 사병 모두 만족스러워하고 있다고 연대회의는 전했다.

"민주주의적 군대란 존재하지 않지만 군대도 민주주의 사회 안에 있다" 사회의 민주화에 더 이상 군대라고 해서 예외로 남을 수만은 없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오히려 군대 내의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 <알림>세계경제 포럼 돌아시아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의 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저항하라!"

·일시: 6월 13일(일) 오후 2시 ·장소: 마로니에 공원 - 장충단 공원 행진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 워크샵 소개

식량주권 국제토론회(I·II) : 오후 1시30분~6시  
물 민영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 오후 1시30분~3시30분  
빈곤과 홈리스 : 오후 1시30분~3시30분  
비공식/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권 : 오후 4시~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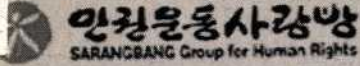
·일시: 6월 14일(월) ·장소: 고려대학교  
·기타 일정은 <http://antiwef.jinbo.net> 참고 바랍니다.

<기사 처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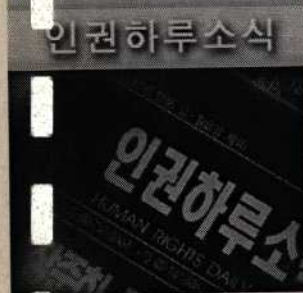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15일 (화)  
제 259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보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2. <기고>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진실
  3.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4. <알림> 인권하루소식 합본호 판매

##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최근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아래 식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나서자 정보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9천9백여 만원을 들여 생체지문인식 기능을 갖춘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개발했고 주민등록 식별단말기를 전국 읍·동 사무소 등에 보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플라스틱카드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을 통해 위변조를 식별하고, 만약 카드의 지문이 손상이 된 경우 민원인의 동의 하에 직접 지문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주민과 윤석주 씨는 "식별시스템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지문활용 어디까지?

1999년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로 일제히 갱신하도록 했다. 그러나 종이재질의 주민등록증보다도 위변조가 더욱 극성을 부리자 카드 제조방법을 바꾸었고, 그것도 소용이 없었지자 2003년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개발한 것.

이에 14일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성명을 통해 "식별시스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지문날인 제도의 철폐"를 요구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도입하려는 행정자치부의 목적은 결국 지문의 활용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킹 장여경 정책실장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국가가 모아놓다 보니 활용 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론을 통해 식별시스템 도입이 알려지자 정보인권단체들도 행정편의주의와 설비를 판매하는 업체의 이윤추구 논리에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생체지문인식 기능을 갖춘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자기신원을 증명하는데 점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제 생체정보까지 동원하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우려한다"며 "서류발급 절차에 이용되는 지문정보, 여권발급에 필요한 생체정보 등 행정당국은 국민을 어디까지 통제하려고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법적 근거 모호, 개인정보보호 원칙 어긋나

더욱이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자치부가 매우 자의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온 것에 비판을 해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19조를 근거로 대고 있다. 주민등록법 19조는 지난 3월 인터넷실명제 관련해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을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19조 2호는 '주민등록 전산조작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장여경 씨는 "주민등록전산자료로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19조는 개인정보보호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목적의 명확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OECD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은 수집 시점을 기준으로 반드시 특정하고 명확한 목적을 전제한다"고 언급한 뒤 "수집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목



적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수집할 당시 지문처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이 쓰이도록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보의 수집목적과 활용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 1999년 경찰이 17세 이상 국민 3600여만 명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며 지문목적 수집에 벗어나 범죄수사목적에 활용되는 행위와 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문정보를 전산 처리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장씨는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지문처럼 지문정보의 수집목적에 어긋나는 활용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 <기고>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진실

여전히 쌀쌀한 바람이 거세게 불던 지난 겨울, 나는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36일 동안 수감되었다. 나의 영장담당판사는 한 마디 말도 않은 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심 판사는 나의 양심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다. 그러다 운이 좋아서 법조계 인사이동 때 혁신적인 판사를 만났고, 나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7명이 거거하는 3명 철골 콘크리트 감옥 체험은 답답함을 견디는 것 이상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해야 하는 아픔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다. 한 사람당 겨우 0.5평의 생활 공간을 유지해야 했고 모든 움직임은 규칙에 따라야 하는 것 정도는 차라리 감내할 수 있었다.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는 뻔히 알고 병역을 거부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무고한 사람을 대규모로 학살하는 전쟁과 전쟁을 연습하는 군사훈련에는 동참할 수 없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나는 한번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옥에 처넣어지는 처사에도 주눅들 이유가 없었다.

군사훈련을 받기보다 차라리 감옥을 선택하는 특이한 사람은 나 하나만이 아니다. 60년 전부터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인훈련 받기를 거부했고 지금도 매년 500명씩 감옥가기를 선택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조국의 안보를 외면하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일관되게 낙인찍히는 것도 감내해 왔다.

사람을 죽여도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면, 혹은 폭력사용을 직업으로 삼는 조직폭력배라 할지라도 징역 1년은 매우 무거운 형벌로 간주하는 우리 사회가, 사람 죽이는 일은 연습조차 할 수 없다는 병역거부자들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년 최고형에 처했다. 병역거부 수감자들은 우리나라 모든 교도소에서 온갖 잡무를 도맡아 하는 1급 모범수여서 이들이 없으면 교도소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이지만 이들의 신념과 인권은 조금도 고려되지 않는다. 교도소의 중요한 부서에는 병역거부 수감자들만 출입할 만큼 이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젊은이라고 인정받고 있지만 범죄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중한 젊은 시절을 회생해 가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장병들의 마음과 고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기 안에 평화를 심어놓은 젊은이들이 걷고자 하는 길은 분명 우리 사회가 인정해야 하고 오히려 살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길은 국익에 우선하며, 미래를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살인은 물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서약 때문에, 전쟁에 반대하는 마음 때문에,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소신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조국의 안보를 외면하는 이기심으로만 보이는지 묻고 싶다. 불살생의 계율을 자기와의 약속으로 삼아야 하는 불교도가 사격훈련과 총칼 찌르기 훈련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왜 인정될 수 없으며, 모든 전쟁과 살인은 악이며 그 악에 동참하는 것도 악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느님이 자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도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전쟁을 매번 찬성했던 주류 기독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쟁에서의 살인은 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심지어 가장 많이 살육한 사람을 영웅으로 추앙하는지 이상할 뿐이다. 대량살상무기 한 두 개면 대규모로 생명과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 엄청난 군사력을 품에 안고 인권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서는 모순으로 다가온다.

병역거부자들은 타인에게 도움은 못 줄지언정 피해는 주지 않겠다는 별것 아닌 소박한 마음을 가졌을 뿐이다. 자기 내면에 평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다보니 병역을 거부하게 된 사람일뿐이다. 군인이 되기보다 죄인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자기가 가진 평화의 소신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일뿐이다.

[염창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기사 처음으로>



14일)

1. 아시아 민중이 함께 '세계화 반대'를 외친다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13~14)에 맞서 WEF반대 공동행동 조직위원회가 '신자유주의·세계화 반대' 행동 계획 밝혀(6.8)/ 세계경제포럼 반대 시위대, 서울시내 행진 "반세계화" 한 목소리(6.13)/ 아시아 활동가들,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 통해 연대 강화 방안 모색(6.14)

2. 법원, 인권보장으로 한 발짝

인천지법 민사2단독 송명호 판사, 부평농협 퇴직자 3명이 "임금채권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48조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6.6)/ 수원지법 성남지원(정종관 부장판사), '피의자도 주소지 또는 예측 가능한 관할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영장 기각(6.9)/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무혐의 처리된 진정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보공개는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6.9)

3. 기타

122개 인권·사회단체, "56년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해온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자"며 17대 국회서 전면 폐지 촉구(6.9)/ 인권단체, △과거사법 제개정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폐지 △집시법, 최저임금법 개정 등 17대 국회에 '인권 기준'에 맞는 입법 활동 촉구(6.10)/ 전남 영광·완도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서남해안 대책위'는 "정부가 발전기금을 미끼로 주민들에게 환상을 심어 주고 있다"며 "핵폐기장 유치 공모안 백지화" 촉구(6.10)/ 보건의료노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시한 넘겨 파업 돌입...산별기본협약체결, 의료공공성 강화,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요구(6.10)

<기사 처음으로>

<알림> 인권하루소식 합본호 판매

<인권하루소식> 합본호가 나왔습니다.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사가 묶여 있는 합본호 21호가 나왔습니다.

·구입 문의 : 02-741-5363  
·가격 : 1만원 (우송료 별도)

\*\*인권이야기는 수요일자에 실습니다.

<기사 처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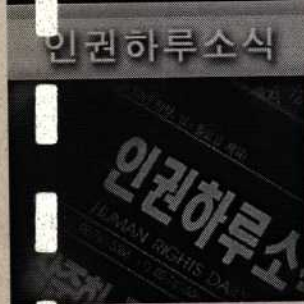
제목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16일 (수)  
제 259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원폭피해자 2세 외면하는 한국정부
2. > 즐거운 물구나무 < '사회적 나이'로 쳐다보지마!
3. ● 유익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만족기
4. 경찰은 왜 집회장에서 사진을 찍어달까

## 원폭피해자 2세 외면하는 한국정부

### 일본 주관, 국내 원폭피해자 건강검진 예정 ... '원폭2세' 포함해야

국내에서는 최초로 실시되는 일본의 원폭피해자 건강검진에 '원폭2세' 및 '원폭2세 환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원폭2세 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원폭2세환우공대위)'는 일본 나가사키현 주관으로 실시될 예정인 한국내 원폭피해자의 건강검진에 원폭1세만이 아니라 '원폭2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홍순식 담당자는 "일본에서 건강검진 실시 의사를 밝혀 왔고 연차적으로 협의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폭2세의 문제는 아직 협의된 것이 없고, 국내에서 외국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관련법 검토도 끝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원폭2세 환우 김형률 씨는 "일본이 대한적십자사와 복지부에 건강검진을 통보해왔고, 1차로 원폭1세 80명을 대상으로 경남 합천지역에서 7월 21일경에 시작될 예정이라는 것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미 계획이 나와있는데도 "복지부가 건강검진이 알려지는 것에 왜 소극적인지 알 수 없다"고 의아해했다.

김형률 씨는 "형식적으로는 일본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 후생성의 공무원이 파견되고 국가예산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진"이라며 "한국의 원폭피해 현실이 일본 정부, 국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원폭1세 뿐만 아니라 원폭2세의 실태를 알릴 수 있도록 건강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폭2세환우공대위는 "원폭1세만으로 건강검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원폭으로 인한 후유증이 다음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폭2세환우공대위에 따르면 일본은 국외 피폭자지원사업을 실시한 이래 복미와 남미에 거주하는 일본인 건강검진에서 원폭2세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전례가 있고, 91년 일본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40억 엔으로 한국의 원폭피해자협회가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원폭2세가 포함된 바 있다. 김형률 씨는 이번 건강검진에서 한국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가 원폭2세의 건강권, 생존권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원폭2세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원폭2세환우공대위는 9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토대로 원폭2세환우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원폭2세환우공대위는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한데 이어 이 달 말경에는 복지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 <기사 처음으로>

## > 즐거운 물구나무 < '사회적 나이'로 쳐다보지마!

"결혼 왜 안해?" 현재 31살인 내게 요 몇 년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질문 중 하나다. 또한 가장 듣기 싫은 질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질문 뒤에는 여자 나이가 30



이 넘었는데도 왜 아직까지 결혼도 안했나는 '사회적 나이'에 따른 '사회적 역할'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10대에는 공부하고, 20대에는 연애하고 결혼해서 30대에는 자식도 키우면서 번듯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40대 이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거늘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나는 질타 아닌 질타가 담긴 질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나이값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가족과 친구처럼 절친한 사람들에 의해서 강요될 때에는 사회적 나이에 대한 부정(?)한 나도 아무렇지 않게 넘기기가 쉽지 않다. 년 참 유별나다는 비난을 매번 감수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재는 우리와 같지 않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소용 대상에서 나를 제외시켜 버리는 것을 종종 보아 왔다.

이처럼 그 나이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요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일 수밖에 없다. 학교 시험은 맞전이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느라 바쁜 청소년을, 남자 친구도 없으면서 선 볼 생각도 않고 20대를 넘기는 여성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들어 버린다. 또한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을 결심하는 40대를, 그리고 홀로서기 위해 황혼의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는 여성을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한다.

나 또한 사회적 나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자신도 모르게 또아리를 틀고 있을지도 모를, 사회적 나이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야 한다. 사회적 나이가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사회적 나이와 통념을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으므로, 나는 오늘도 꿈꾼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도 가족을 꾸릴 수 있는 여성으로 살 수 있기를, 안정적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의 불안한 미래를 고민하는 삼십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사 처음으로>

##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안숙기

나는 단신가구이다. 내가 한달 동안 사는데 필요한 비용이 대략 얼마쯤 되는지 계산해 봤다. 월세 15만원, 공과금 5만원, 교통비 10만원, 식대 20만원, 핸드폰 요금 6만원, 사회보험 등 7만원. 여기까지만 해도 63만원이다. 여기에 추가로 드는 술값이나 경조사비, 단체후원금, 가끔이긴 하지만 옷이나 신발, 화장품, 책값, 병원비, 미용실 비용 등을 더해보면, 저축은커녕 영화 한 편 안보는 나의 한달 생활비 규모는 100만원이 넘는다.

추운 겨울, 중증장애인의 몸으로 노숙동성을 결의했던 최옥란열사는 한달에 28만원을 받는 수급자였다. 그녀는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생계비 28만원으로는 병원에 갈 수도, 아이의 양육권을 찾아올 수도 없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삶을 순용하라고 강요하는 정부와 사회의 시선에 맞서 투쟁했으며, 지금도 그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기준선이 있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 기준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의 경우 56만원,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5만 6천원이다. 56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이며, 36만원으로 한 달을 사는 것은 죽지 않기 위한 몸부림에 가깝다. 문제는 이렇듯 낮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계층이 800만에 이르고 저임금 노동자 규모 또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 대상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제도이기는 하나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제도는 한국 사회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특히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기초법 수급대상자와 비대상자 사이를 넘나드는 민중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명시해놓은 제도가 대다수 서민의 삶을 '최저수준'으로 낮추며, 일해도 일하지 않아도 가난한 삶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6월 25일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날이다.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투쟁주체를 형성해온 최저임금투쟁은 어느 해보다도 그 열기가 뜨겁다. 또한 2004년은 향후 3년 동안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계속하여 결정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의 투쟁이 보다 의미 있는 것은 각각의 투쟁주체들이 만나 2004년 최저임금·최저생계비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은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최저임금·최저생계 보장"의 요구를 제기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투쟁은 단순히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보장의 요구를 넘어 불안정한 노동과 낮은 임금이 빈곤을 양산하고 심화시키고 있음을 폭로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이제 불안정노동과 빈곤은 동시에 사고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빈곤은 더 이상 '노동'과 분리되어 접근할 수 없으며, 그런 점에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불안정노동철폐투쟁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전선으로 사고되어야 할 것이다. ©유의선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사무국장)

<기사 처음으로>

## 경찰은 왜 집회장에서 사진을 찍어댈까

### '집회 감시'가 아니라 '권리 보호'가 경찰의 역할

"저 XX들도 어차피 같은 무리들이니까 그냥 (방패로) 찍어버려"

지난 13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에서 경찰들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던 '집회현장 인권침해 시민감시단(아래 시민감시단)'을 향해 한 전경이 던진 말. 방패를 자세히 보니 전경의 과도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테두리'가 유독 아랫부분만 하나같이 제거되어 있었다.

아시아에서 온 150여 명의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1만 5천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진은 대학로에서 장충단 공원까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집회 참가자에 대한 감시를 멈추지 않았다. 집회 대오가 퇴계로 5가를 막 지났을 무렵 비디오 촬영으로 불법 체증을 하던 서울시경 체증반 소속 사복경찰이 집회 참가자에 의해 적발되었다. 집시법 제17조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

오후 3시 30분 경 집회 참가자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열리는 신라호텔 근처 장충단 공원 앞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윽고 집회 장소 주변, 심지어 집회 대오를 가로막았던 전경 버스 위 등 곳곳에서 다수의 사복전경·경찰은 집회 참가자에 대한 불법 체증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소속과 이름을 밝히려는 시민감시단의 요구에 이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불법 체증을 멈추고 오리발을 내미는 '기민함'을 보이기도 했다. 집시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에서 활동한 강이현 씨는 "집회는 권리인데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한다는 것 자체가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킨다"며 경찰의 감시를 비난했다. 평화적인 집회의 경우 사진·비디오 촬영 등 체증을 통한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는 집시법에 근거한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집회를 할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장충단 공원 앞에서는 몇 명의 시위대가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거나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이마가 찢어졌다. 전경들은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던 시위대들에게조차 '살인적인' 방패를 휘둘러댔다.

<기사 처음으로>

제목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17일 (목)

제 259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보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경찰, 불심검문 불법관행 여전
2.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3. [인터뷰] 송두율 교수 황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4. <알림> [주민등록증을 찾아라!] 방영

## 경찰, 불심검문 불법관행 여전

### 불심검문 사유도 밝히지 않고, 검문 불응하면 강제연행?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관행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심검문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검문을 거부한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권영국 변호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것.

16일 낮 12시 40분 경, 권 변호사는 법률원 직원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 2명으로부터 불심검문을 요구받았다. 권 변호사는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과 '검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경찰은 신분증만 제시하고 검문의 이유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왔다"고만 대답했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계속해서 "검문사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신고내용에 대해 일체 대꾸하지 않았고 권 변호사는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 연행에 항의하며 저지하려던 법률원 정용택 송무차장과 경찰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은 정 차장을 '공무집행방해'로 권 변호사와 함께 연행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수배' 중인 사람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권 변호사는 "경찰이 검문의 타당성을 납득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검문을 거부한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고 미란다 고지도 안 했다"며 경찰의 불법 행위를 비난했다.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측은 이날 오후 5시가 돼서야 체포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정식 사과하고 정 차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인정해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맹주천 변호사는 "경찰이 검문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 강제연행하며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사과했다"고 전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4항에 따르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2항에는 (1면에서 이어짐)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곤 상임활동가는 "이번 사건은 경찰의 불심검문과 체포과정에서의 불법 관행이 여건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전문적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일반 시민의 경우에 경찰의 불법여부를 따지기 전에 연행을 거부하고 저항만 해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뒤집어쓰지 않겠냐"고 말했다.

<기사 처음으로>

##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와 관련해 인권위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